

출생아 두 달 연속 역대 최소, 지역 소멸 막을 대책은

 강원일보 오피니언

강원특별자치도 내 출생아 수가 두 달 연속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5월 인구동향·6월 인구가동’에 따르면 5월 도내 출생아 수는 54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5월 출생아 576명 대비 35명 감소한 것으로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81년 이후 역대 5월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올 4월 출생아 수가 역대 4월 중 가장 적었던 데 이어 5월도 역대 최소치를 기록한 것이다. 같은 달 도내 사망자 수는 1,152명으로 조사됐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증가는 612명 감소를 기록했다. 올 들어 월별 가장 높은 감소치다. 도내 인구는 2016년 8월부터 자연감소 중이다.

인구 감소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수치로 보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물론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정부와 함께 종합적인 대책을 서둘러 수립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최근 혼인 연령은 계속 늦어지고 있다. 혼인 건수도 줄어들고 있다. 혼인 이후 아이를 출산하지 않거나 일정 기간 이후 아이를 낳는 지연 출산 현상도 뚜렷해지고 있다. 자녀 출산이 늦어질수록 다자녀 출산 가능성은 더욱 적어질 수밖에 없다. 혼인을 하고도 아이를 낳지 않고 부부만의 삶을 추구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저출생 기조를 바꾸는 게 쉽지 않다. 그동안 정부가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지만 백악이 무효였다는 것만 봐도 그렇다. 인구 문제는 강원자치도의 과제가 된 지 오래다. 지역이 발전하고 경제 성장을 하려면 일정한 수준의 경제활동인구가 유지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속도로 인구 감소가 이어지면 지역사회의 경쟁력은 갈수록 추락할 수밖에 없다.

인구 문제는 고령화, 지역 소멸 등과 연동돼 있다. 경제활동인구가 줄면서 경제는 점점 활력을 잃어 가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자칫 때를 놓치면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투입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을 수도 있다.

이제 시행착오를 벗어나 실질 대책을 실행해야 할 시점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은 곳’,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는 게 행복한 지역’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무엇이 아이를 낳지 않고 고향을 떠나는 현실을 초래했는지 잘 따져봐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청년들을 직접 만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출처:강원일보 오피니언

폭염에 16명 사망... ‘침묵의 살인자’로부터 취약층 보호해야

 동아일보 오피니언

장마가 끝나고 낮 기온이 33도를 넘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지난 주말에만 열사병을 포함한 각종 온열질환으로 최소 16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아직 여름이 끝나지 않았는데 지난해 폭염 사망자인 9명을 훌쩍 넘어선 것이다.

온열질환자 수도 급증해 최근 닷새간 357명이 더위를 먹고 병원을 찾았다. 올해 누적 온열질환자 수는 1,117명으로 늘어 지난해 기록(1,564명)을 깼 것으로 전망된다.

폭염은 태풍이나 폭우와 달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국내에서는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내는 자연재난이다. 정부가 2018년 호우 태풍 강풍 대설과 함께 폭염을 5대 법정 자연재난에 포함한 이후 4년간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146명으로 전체 사망자(218명)의 67%를 차지한다.

나머지 4개 자연재해로 사망한 사람을 모두 합한 수보다도 많다. 폭염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이유다. 더구나 올해는 슈퍼 엘니뇨 현상이 전 세계를 극한 폭염으로 몰아넣은 데다 한반도의 경우 예년보다 습도까지 높은 폭폭 찌는 더위가 이어지면서 피해를 키우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온열질환자의 35%는 야외에서 일하는 농림어업이나 단순노무 종사자들이고, 연령별로는 27%가 65세 이상 고령자였다. 지난 주말 폭염으로 숨진 이들도 대부분 충청도와 경상도 등지에서 띄약벌 아래 농사일이나 벌초를 하던 70~90대 고령자이다.

노인들은 특히 온열질환에 취약하므로 한여름 낮 시간의 야외 작업은 피해야 한다. 건강한 젊은이들에게도 폭염 속 노동은 위험하다. 야외 공사장에서 충분한 휴식 시간과 휴식 공간이 제공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출처:동아일보 오피니언

보건복지부

취약노인 건강한 여름나기 지원 강화

- 폭염 대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을 통한 보호대책 추진 중 -

- 보건복지부는 최근 무더위로 인한 독거노인 등 취약노인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 대비 보호 및 지원대책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어르신들께는 폭염특보 발효 시 농사일 등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물 마시기와 휴식으로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폭염 대비 취약노인 보호대책’을 시행 중이다. 폭염특보 발효 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담인력(생활지원사*)이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서비스 이용 노인(총 50만여 명)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 (인원/ 주요활동) 전국 3.4만여 명/ 폭염대응 행동요령 숙지 및 사전피해 예방 활동, 폭염특보 발효시 수행기관 인력이 일일 안전확인 및 상황보고 실시 등
- 또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댁 내 어르신들의 위험 상황을 재빠르게 감지한다. 어르신들께서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호출기를 눌러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거나 활동량 감지기를 통해 쓰러짐이 의심되는 상황을 확인해 안부를 살피고 있다. 폭염특보 알람 및 음성신고 등 부가서비스도 제공한다.
- 이 외에도 예방적 관리를 위해 폭염 대비 행동요령 및 건강수칙 포스터를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에 전달하였고, 홍보물품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건강관리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 (포스터) 8.1만 부 배부(5월), (홍보물품) 건강수칙 포함 쿨토시 4만 개 배부(7월)
- 추가로 민간기업·단체 후원을 통해 온열질환에 취약한 노인 대상으로 냉방용품, 건강식품 등을 전달하고 있다.
 - ('22년 지원실적) 서큘레이터, 선풍기, 건강식품, 쿨매트 등 약 11.3만 명 지원(약 29.4억 원)
- 보건복지부는 시도 및 시군구와 함께 취약노인 보호대책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폭염 대책 기간(5.20.~9.30) 동안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폭염에 따른 노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예비군 훈련 제도 개선된다

- 급식품질 등 ‘예비군 훈련 불편사항’ 관계기관과 협업해 제도개선 추진 -

- 앞으로 휴일 예비군 훈련이 확대되고 훈련 시 제공되는 급식 품질이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실거주지와 가까운 훈련장에서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방부, 병무청과 함께 예비군 소집훈련의 불편 및 불만 사항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해결책을 마련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앞서 국민권익위가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예비군 훈련 불만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22,342건으로 2020년~2023년 4월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훈련 중지 이후 지난해 훈련을 재개하며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민원 유형별로 보면, ▲훈련소집통지서 개선 등 시스템 불만 29.2% (1,639건) ▲원거리 훈련장소 불만 26.3%(1,473건) ▲훈련 급식 품질 불만 25.4%(1,422건) ▲훈련 입소 불편 8.8%(494건) ▲한 부자(父子) 가정 훈련 변경 7.4%(414건) ▲휴일 예비군 제도 확대 3.0% (167건) 등이 있었다.
- 각 지역부대는 평일 훈련에 불참하는 대상자들을 위해 ‘휴일 예비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신청을 받아 133개소에서 2만 1천여 명(85%)이 휴일 훈련소집에 참석했다.
 - 그러나 자영업자 등은 “생계유지 등으로 예비군 평일 훈련에 참여가 어려우니 휴일(일요일) 예비군 훈련 운영을 확대해 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평일에 훈련받지 못한 자영업자 등의 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부대장 재량으로 운영했던 휴일 예비군 훈련을 최소 1~3일로 확대하도록 했다.
- 또 어린 자녀를 혼자 키우는 한 부자(父子)가정의 경우 장기간(2박 3일) 예비군 소집훈련으로 인해 자녀 방치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 현행 법령에는 차상위 계층이면서 한 부자가정일 경우에만 훈련 보류자로 규정돼 있고, 동원훈련 계획상 부자가정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훈련 연기는 4년 통틀어 2회로 제한돼 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한 부자가정이 2박 3일 동원훈련 기간 중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훈련 연기 횟수 제한(2회)을 폐지하도록 했다.

- 동원훈련의 경우 현역 장병과 동일한 부대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역예비군의 경우 도시락 급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 도시락 업체선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나, 세부지침은 각 군별 별도로 마련하고 있어 부대별 급식품질과 수준이 차이가 발생하였다.
 - 실제 예비군 훈련 급식에서 이물질(머리카락·플라스틱 조각 등), 부실한 급식, 복통과 설사 유발 등의 불만 민원이 있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급식 관련 규정을 최소한 국방부 훈령 등으로 격상해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통합된 급식 지원 세부기준을 마련해 공개하도록 했다. 이어 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시 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들의 의견을 우선 반영하도록 했다.
- 예비군은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나 직장을 단위로 한 지역예비군과 직장예비군으로 각각 편성돼 운영된다.
 - 그러나 실제 거주지에 가까운 훈련장이 있는데도 주소지를 이유로 먼 훈련장소를 선택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 또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데 강원도 ○○ 예비군 훈련장소로 통지돼 불편하니 가까운 거리에서 훈련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실제 거주지에서도 예비군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선택 기회가 부여되도록 전국단위 연간 훈련일정 계획을 사전에 안내하고, 신청가능 범위를 10%에서 15~20%로 최대한 확대·운영하도록 했다.
- 병력동원 훈련소집 통지서에는 입영일시 및 입영부대, 훈련기간과 훈련장소(도착지) 순으로 기재되어 있다.
 - 그러나 훈련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훈련기간과 훈련장소가 후순위로 기재돼 있어 수요자 관점에서 다소 혼란을 초래했다.
 - 또 교통체증 등으로 훈련장 도착시간이 다소 지체된 경우에도 예외 없이 다시 집으로 돌려보낸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수요자 입장에서 훈련정보를 알기 쉽도록 훈련소집통지서 양식을 변경하고, 훈련 입소 시 천재지변 및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도로 여건에 따른 교통체증 등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입소를 허용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민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해 정부혁신에 부합하는 주요 국정과제와 사회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 빈번하게 제기되는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로 생활안전 문제를 해결한다

- 생활안전 문제해결을 위해 대국민 대상 교통사고, 지하공간 침수 등 5개 분야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한 우수 아이디어 5건 선정 -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민의 일상생활 속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해 ‘2023 생활안전 문제해결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여 최종 우수 아이디어 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올해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전문기관의 검토와 상세 기획을 거쳐 내년도 ‘국민수요 맞춤형 생활안전 연구개발 사업’의 신규과제로 추진될 예정이다.
- ‘생활안전 문제해결 아이디어 공모전’은 2018년부터 매년 진행되어 왔으며, 올해는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19일까지 교통사고, 지하공간 침수 등 5개 분야*에 대해 공모를 진행하여, 총 181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다.
 - * 안전취약계층, 산불, 사업장 사고, 지하공간 침수, 교통사고
 - 접수된 아이디어는 전문가가 아이디어의 참신성, 시급성, 기술개발 타당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여 국민심사 후보 10건을 선별하였고,
 - 선별된 10건에 대해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온국민소통(www.sotong.go.kr)’에서 국민투표를 거쳐 최종 우수 아이디어 5건을 선정하였다.
 - ※ 최종 우수작은 전문가 심사(50%) 및 국민심사(50%)를 합산하여 선정
- 선정된 5건의 우수 아이디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형차의 사각지대 보행자 무선 감지 센서 개발’은 보행자 감지 시, 대형차 운전자에게 비상신호를 보내는 무선 시스템을 개발하여 대형차의 사각지대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자는 아이디어이다.
 - ‘어린이 감지 차량 센서 개발’은 스마트 신호등에 설치된 열화상 감지 센서를 통해 보행자가 감지되었을 경우 운전자에게 신호를 보내 대형차의 사각지대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자는 제안이다.
 - ‘사고/재난위험을 알리는 전광 알림 가로등’은 재난 및 교통사고 발생 시 근방의 가로등 위치로 사고가 났음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가로등의 색 전환 등으로 인근 차량에 신호를 줌으로써 2차 사고를 예방하자는 제안이다.
 - ‘고령 운전자 운전 능력 저하 감시 및 알림 시스템 개발’은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 수준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알리는 장치 개발을 통해 운전자 스스로 운전 능력 인식 등 교통사고 저감을 위한 아이디어이다.

○ ‘지하 침수 수위 알림 센서 개발’은 반지하 주택 침수 시 거주자에게 위험 상황을 알리고 방법창 탈착 등 탈출이 용이하도록 하며, 유관기관에 침수 알림을 통해 신속한 대응과 구조로 인명피해를 예방하자는 아이디어다.

□ 최종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 5명에게는 각각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함께 상금 40만 원이 수여되며, 시상식은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개최되는 ‘2023년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고광완 재난협력정책관은 “일상생활 속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번 공모전에 관심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 “정부는 국민이 직접 제안한 생활안전 아이디어를 연구개발 과제로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효율화, 그 해법은?

김 지 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01. 지방자치단체 조직 효율화 필요성 제고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관리 혁신 필요

- 코로나 펜데믹(pandemic)과 같이 정부가 전사적으로 대응해야하는 장기간의 비상상황 발생과 종료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필요
-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한 탄력적 조직관리에 실패할 경우,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와 성과저하 등으로 이어지게 됨
- 인구변화 등 지역의 행정수요 변화와 베이비부머세대 공무원의 퇴직 등 공직사회 내부의 변화 속에서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계적 조직관리 필요
- 제한된 인력을 재배치 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직구성원과 주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직진단 결과 도출 필요
- 이를 위해 보다 체계적인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기능별 투입인력을 재배치 하고, 조직의 구조를 재편하는 것이 필요

02. 효율적인 자체 조직진단 방안

환경분석에 근거한 조직진단 실시

- 지방자치단체 행정수요 분석을 통해 그에 부합하는 기능·기구·인력 개편방향 도출
- 기관 전체 및 각 부서 차원에서 지역의 행정수요를 ‘인구, 정주여건, 산업’측면에서 검토하고, 기능별 강화-축소의 방향을 도출
- 기관장의 방침 변화,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의 시책변화 등 행정·정책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에 부합하는 기능·기구·인력 개편방향 도출
- 기관 전체 및 각 부서 차원에서 기능별 중요도 변화, IT기술 도입 및 법령·조례 제·개정 등 업무의 양이나 업무수행의 방식이 변화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능별 강화-축소의 방향을 도출
- 유사지자체와의 비교를 통해 기능별 인력배치의 비율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환경분석에 기반한 기능별 우선순위의 변화를 고려하여 조직개편의 방향 설정
- 기구·인력에 관한 현황조사 및 운영실태 비교분석을 통해 인력감축 또는 확대 필요분야를 정하고, 기구정비 및 개편의 방향을 설정

기능분류체계(BRM)에 근거한 수행업무의 분류

-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기능분류체계(BRM) 상의 기능단위로 분류하여 기능별 업무량 측정의 기초를 마련
- 온나라 문서대장의 생산문서를 지방자치단체 기능분류체계(BRM)에 따라 분류하여 각 부서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별 업무의 리스트를 만들고, 이때 누락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각 업무의 담당자가 직접 추가할 수 있는 조사표를 개발

다차원적인 업무량 분석기법의 활용

- 다차원적인 업무량 측정방법을 활용하여 각 부서별, 기능별, 업무량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노력 필요
- 어떤 업무량 측정방식도 실제 업무량을 완벽하게 측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방법론적 다각화를 통해 실제에 가까운 업무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결과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방법1) 조사표에 근거하여 업무담당자가 기능별 수행업무에 투입된 시간을 기술하도록 하고, 이를 부서별 또는 기능별로 합산하여 업무량을 측정
- (방법2) 온나라 문서대장상의 업무를 기능분류체계(BRM)에 따라 분류하고, 각 부서별 또는 기능별 업무량을 측정
- (방법3) 그밖에 직원의 근무시간, 기타 업무량을 측정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자료 등을 활용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업무량 측정의 기준을 개발·활용

조직 내·외부 공감대 형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의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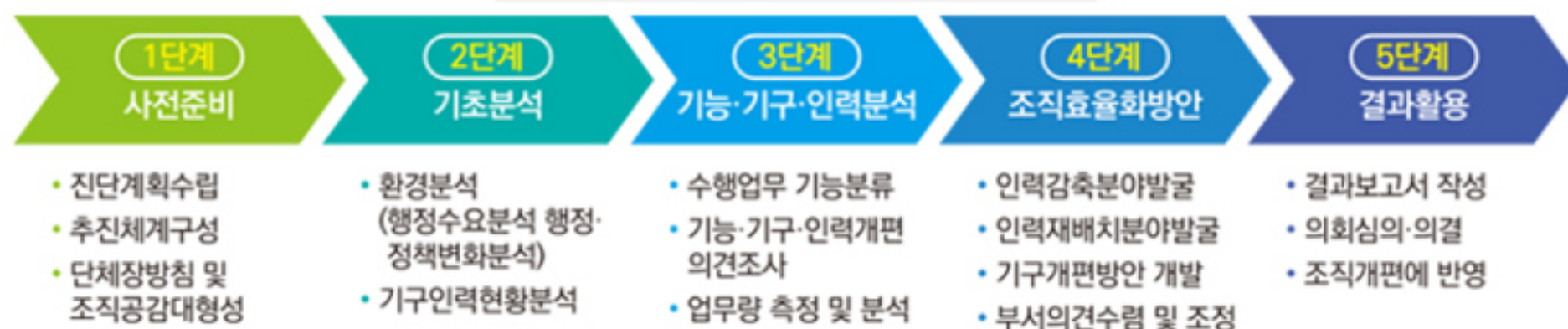
- 환경분석결과와 업무량 측정결과를 종합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구개편 및 인력재배치 방안 모색

- 기구개편 및 인력재배치에 관한 각 부서의 의견수렴을 위한 조사표 개발 및 배포, 취합 필요
- 환경분석결과를 기반으로 기능별 우선순위를 정하고 각 부서의견 중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내용을 선택함. 또한 각 부서의 의견에 없더라도, 기관 전체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구개편 및 인력재배치 필요 사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
- 조직개편 및 인력재배치 방안 “초안”에 대한 기관 내부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필요
- 초안과 초안 도출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공개하고, 초안에 대한 조직 내부의 의견수렴 필요(예시: 간부회의 및 직원워크숍, 의견조사 등)
- 민·관합동 조직진단반 등 조직관리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 제고
- 초안에 대한 수정을 통해 조직구성원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결과 도출
- 업무량 측정방법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이해제고를 위해 직원 교육 및 워크숍 운영,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활용
 - 민·관합동 조직진단반의 활용

03. 지방자치단체 조직진단 역량 제고 방안

지방자치단체 조직진단 매뉴얼의 활용

- 지방자치단체 자체 조직진단은 다음과 같은 5단계의 매뉴얼에 따라 수행(행정안전부, 2023)
 - 지방자치단체 자체 조직진단 매뉴얼의 5단계



지방자치단체 조직진단 역량 제고를 위한 컨설팅과 지원필요

- 지방자치단체 조직업무 담당자와 조직진단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 필요
- 각 지방자치단체 조직업무 담당자의 조직진단 역량 제고를 위해, 새롭게 개편된 조직진단 매뉴얼 교육 및 권역별 워크숍 프로그램 필요
- 지방자치단체 조직·인사업무시스템 개선을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조직·인사문화 확대 필요
- 장기적으로 국가차원의 지방자치단체 조직·인사에 관한 업무지원시스템 개발 및 배포를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조직·인사문화 확대필요. 이를 통해 조직·인사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합리성을 재고할 수 있음

출처 : 김지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알기쉬운 정책

열쇠말로 알아보는 정책

창의인재 동반사업 🔑

#콘텐츠_인재양성 #1:1_멘토링 #창작지원금

#인재양성_선순환 #폭넓어진_기회

문화체육관광부

열쇠말로 알아보는 정책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_인재양성



‘창의인재 동반사업’은 콘텐츠 산업을 이끌어 갈 예비 창작자의 역량을 개발하고 업계 진출을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대표적인 인재양성사업입니다.

지난 2012년 시작해 12년간 3,200여 명의 교육생이 배출됐습니다.

알기쉬운 정책

열쇠말로 알아보는 정책

문화체육관광부

#1:1.멘토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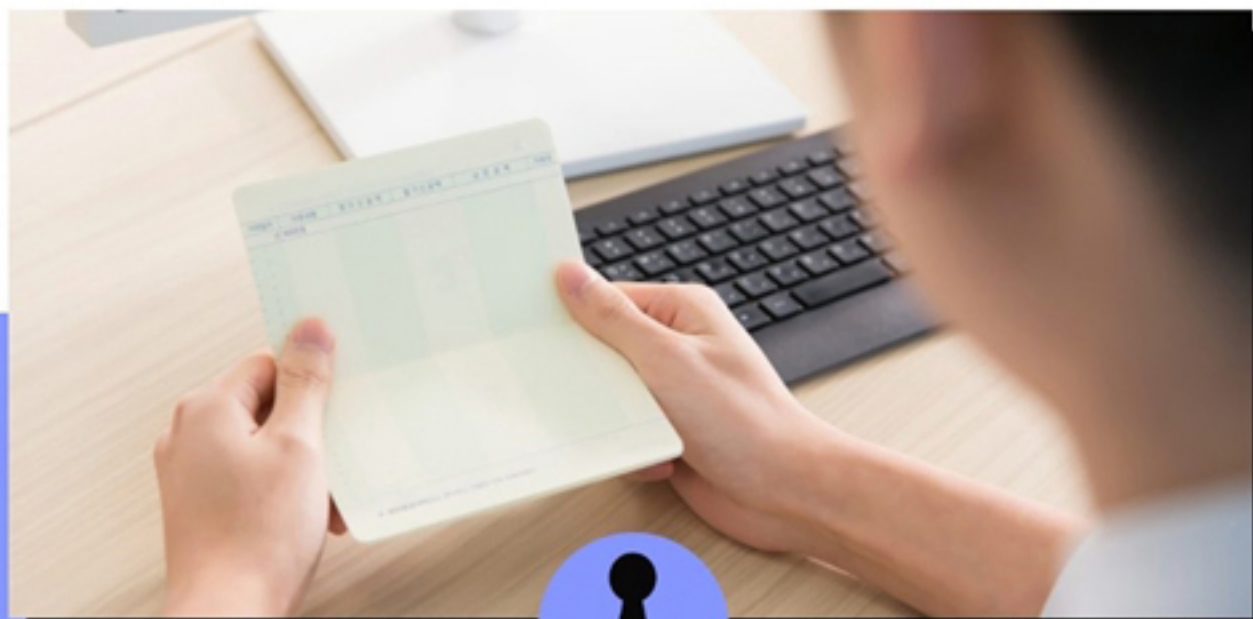
가장 큰 특징은 콘텐츠 분야별 전문가(멘토)와 예비 창작자(멘티)의 1:1 연결을 통해 '스승과 제자' 형태의 '밀착형 도제식' 멘토링을 받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전문가의 현장 작업방식, 실무 노하우 등을 생생하게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열쇠말로 알아보는 정책

문화체육관광부

#창작지원금



불안정한 수입으로 인한 생계 걱정에서 벗어나 교육과 창작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약 6개월간 매달 150만 원의 창작지원금이 주어집니다.

수료한 교육생의 우수한 프로젝트는 후속 지원도 받을 수 있어 지속적인 창작활동도 가능합니다.

알기쉬운 정책

열쇠말로 알아보는 정책

문화체육관광부

#인재양성.선순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문지원 작가,
장편 애니메이션 <태일이> 홍준표 감독 등이 대표적인 교육생입니다.

최근에는 과거 교육생들이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전문가로 성장해 사업의 멘토로 참여하면서
콘텐츠 인재양성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열쇠말로 알아보는 정책

문화체육관광부

#폭넓어진.기회



2023년에는 방송·스토리, 게임, 음악, 공연, 웹툰, 애니메이션 등의 분야에
419명의 교육생이 선발됐습니다.

특히, 장애예술인들과 무장애(배리어프리) 관련
프로젝트 개발을 희망하는 예비 창작자를 우대해
K-콘텐츠가 더욱 다양성을 갖추고 폭넓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알기쉬운 정책

케이(K)-콘텐츠가 한국경제의
'게임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예비 창작자들이 성장 발판을 든든히 하고
창의인재 발굴과 양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